

2025년도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(재정경제부 등 소관)

2026. 5.

대한민국정부

- 목 차 -

(국가데이터처: 22건)

1. 국가정책 활용 통계의 품질관리 강화	1
2. 동성 배우자 등 민감 사항 통계 반영의 신중한 검토	1
3. 사회적 실체 반영 및 통계적 책무 이행을 통한 차별 방지	2
4. 노인 연령 기준 개선 필요	2
5.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의성 제고 및 제도적 장벽 해소	3
6. 물가지수 개편 주기 단축 및 보조지표 활용 강화	3
7. 자가주거비의 물가지수 주지표 전환 및 객관성 확보	4
8. 사회이동성 지표체계 구축	4
9. 고용의 질 지표체계 공식 통계화	5
10. 현장 조사요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	5
11. 경제통계조사 시 사업체 응답 부담 완화	6
12.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절감 방안 강구	7
13.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	7
14. 쌀 소비 통계 오류 시정 및 통계 생산 체계 구축	8
15. 데이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	8
16. 실질적 보안 강화 조치 및 대응 시스템 마련	9
17. KOSIS 복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세부 계획 마련	10
18. 지방 조직 명칭 일원화 및 행정 정합성 확보	10
19. 가구 단위 조사 방식의 개인 중심 전환 검토	10
20.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공표 및 플랫폼 종사자 통계 구축	11
21. 외로움 조사 항목 세분화 및 국제 비교성 확보	12
22.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개선 방안 마련	13

국 가 데 이 터 처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. 국가정책 활용 통계의 품질관리 강화 · 국가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통계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완료</u> ☐ 통계 사전제공 관리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* 완료('25.9.30.) * (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) 사전제공 받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, 사전제공 요청사항이 변경된 경우 요청문서를 재제출하도록 함 - 통계 사전제공 절차 등 통계법령 교육('26.3)을 통해 법령 준수 유도 ☐ 품질관리 체계 내실화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○ '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시 핵심진단 시범 도입('25.1.~) ○ 통계품질관리 기본계획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분과위 신설·운영('25.1.~)
2. 동성 배우자 등 민간 사항 통계 반영의 신중한 검토 ·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 배우자 등 민감한 사항의 통계 반영에 신중을 기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인 가구원이 가구주와의 관계 중 '배우자'로 선택*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 진행(정부법무공단, '26.1.) *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 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고 총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<향후 추진계획> ☐ 법률자문 결과, 선행 국가 사례 검토,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저료처리 방향 최종 결정 예정('26년 하반기)

시정 · 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3. 사회적 실체 반영 및 통계적 책무 이행을 통한 차별 방지 · 법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여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통계적 책무를 충실히 고려하여 통계를 생산할 것	<시정 · 처리결과> 조치중 ☐ 인구·가구·주택 부문의 사회현상이 정확히 반영되고 취약·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는 통계 생산을 위해 항목선정, 조사실시, 결과공표 등 조사실시 전반에서 검토하겠음 <향후 추진계획> ☐ 2030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조사항목 검토 및 선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-국민생각함,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요,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사회계층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추진 계획(~29.12.)
4. 노인 연령 기준 개선 필요 · 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	<시정 · 처리결과> 조치중 ☐ 노인 연령 기준 관련 재검토('26.5월) ○ 통계기준* 65세, 관련 법령·정책별로 노인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* OECD 등 국제 기준 65세 ○ 노인 연령 기준은 정책 영역에 따른 설정이 적절하며 연령 상향은 범사회적 논의 필요 ○ 관련 통계에서 고령자가 잘 측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 연령 세분화 및 제공 필요 ☐ 고령층 연령 세분화 추진 ○ 고용동향의 고령층 연령구간 세분화('24.1월~) * (취업, 고용) 70세+ → 70~74세, 75세+ ○ 생활시간조사 고령층 세분화('25.7월) * 60세 이상 → 60대, 70대, 80세 이상 ○ 가계동향조사 고령층 세분화('26.5월) * 60세 이상 → 60대, 70세 이상 <향후 추진계획> ☐ 사회통계 고령자 연령 세분화 추진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5.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의성 제고 및 제도적 장벽 해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공표 시기를 단축하고, 행정자료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결과 공표 시기 단축(조치완료) - 그간 조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표시기를 15일 단축 조치 완료('22.12.) * ('12년~'21년) 12.16.~21일 ⇒ ('22년 이후) 12.1. 등 12월 초 - 종합소득세 등 행정자료 입수 후 자료처리 및 통계 작성을 위한 필수기간 필요 * ① 조사 실시 및 압력(4~5월), ② 행정자료입수(6~9월), ③ 가구마스터 및 가중치작성(10월), ④ 집계분석 및 결과작성(11~12월초) ☐ 행정자료 활용 제도 개선(조치중) - 금융거래정보(금융자산) 입수를 위한 통계법 개정* 계획 수립('25.12.~) * 통계법 상 금융거래정보 입수 관련 금융실명제법 예외 신설 - 법개정 관련 금융위원회 협의('26.4.21.), 금융자산 자료 활용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원과 MOU 체결('26.5.28.) 및 복지부 등 자료입수 협의 중('26.6.~) <향후 추진계획> ☐ 통계법 개정 등 금융자산 기초자료 확보 추진 - 금융데이터의 안정적 입수를 위한 통계법 개정 및 관련 부처 등과 협업 추진
6. 물가지수 개편 주기 단축 및 보조지표 활용 강화 변화된 소비 패턴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물가지수 개편주기를 5년에서 2-3년으로 단축하고 보조지표 활용을 강화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소비자 기호 및 구매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 품목, 가중치, 생활물가지수 등의 보조지표를 '25년 기준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기준년 개편을 추진 중 <향후 추진계획> ☐ 대표품목 및 가중치 조정, 품목분류 변경, 보조지표 개편 등 '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공표 예정('26. 12월)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7. 자기주거비의 물가지수 주지표 전환 및 객관성 확보 OECD 주요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서 제외하여 발생하는 현실 물가와 괴리를 해소하고, 이를 주지표로 전환하여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현행 집세지수 및 자가주거비 작성방식 개선 검토 중 <향후 추진계획> ☐ 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은 시산결과 검토 분석,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,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('26.12월)
8. 사회이동성 지표체계 구축 사회이동성 지표 등 기본권 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소득이동통계 개발 및 공표('24.12.) ☐ 청년층 경제활동·소득이동지표* 개발('25.10.) * 지속취업자와 간헐적취업자의 소득이동지표 ☐ 5극3특 정책맞춤형 지표* 기획보도('25.12.) *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따른 소득이동지표 ☐ 통계등록부 연계 청년층 소득이동성 연구('26.) ○ 일자리 정보를 연계해 청년층 지표 연구 <향후 추진계획> ☐ 자료 보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발해 나갈 예정임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9. 고용의 질 지표체계 공식 통계화 · 단순 취업자 수를 넘어 ‘고용의 질 지표체계’를 공식 통계화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 방안 기초 연구 ○ UNECE 고용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기반 연구 ○ ICSE18* 및 국내 고용 상황 반영 노력 *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(2018년) ○ 작성 가능 통계 검토 및 신규 통계 제안 <향후 추진계획> ☐ 고용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마련 ○ 고용의 질 측정 관련 정책연구용역 실시(‘27년) ○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 및 시산 ○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회의 실시
10. 현장 조사요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· 현장 조사요원이 직면한 물리적·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사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완료</u> ☐ 현장조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‘현장조사 안전관리 추진계획’ 수립(‘26.2월) ○ 야간조사, 안전유의지역* 방문 시 동행출장(2인 1조)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훈령 개정) 및 안전사고 예방·대응을 위한 안전용품** 보급 확대 등 추진 *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, 철거 지역 등 ** SOS 단말기, 녹음기능, 신분증케이스, 교통사고 방지용품(소화기 등), 온열질환 예방용품 등 ☐ 아울러 조사원의 정신적 고충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단체보험 운영 <향후 추진계획> ☐ 현장조사 안전·인권 보호를 위한 조사환경 개선 지속 추진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1. 경제통계조사 시 사업체 응답 부담 완화 · 경제통계통합조사 시 유관 기관과의 자료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체 응답 부담을 최소화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행정자료 대체 검토 ○ 국세청 신고자료 등 행정자료 대체가 가능한 사업체 유형 및 조사항목 검토 ☐ 민간자료 활용 검토 ○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의 기업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→ 기업정보 및 실제 조사 결과 간 비교 분석 등 ☐ 현장 방문 요령 조사원 교육 강화 ○ 재무제표 필요 시 사업체 제출 요청 절차에 관한 세부 교육 내용 마련 <향후 추진계획> ☐ 일부 사업체 대상 행정자료 대체 추진(27년 9~12월) ○ 겸업 없는 단독 사업체의 매출액, 영업비용 등 사업실적 항목 행정자료 대체 ☐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 활용 추진(27년 6~7월) ○ 경제통계 통합조사 시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기업정보DB 접근 권한 부여 ☐ 경제통계 통합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(27년 5~6월) ○ 재무제표 입수를 위한 사업체 협조 절차 교육 실시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2.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절감 방안 강구 ·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위해 태블릿PC를 대량 구매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렌탈·리스 도입 및 기존 기기 재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2025 인구주택총조사 태블릿PC의 처내 자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수요 사전 파악('23.11.)하여 활용('26.1.~)(총 17천대) ☐ 처내 자체 활용 수량 외의 태블릿PC는 타 부처 관리전환 완료(~'26.5.)(총 12천대) ⇒ 현재 태블릿PC 잔량 없음 <향후 추진계획> ☐ 2030 인구주택총조사 태블릿PC 구입 및 활용 검토시에는 렌탈·리스 등 단기 사용 방안과 사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(~'28. 상반기)
13.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 ·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하락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완료 ☐ 전주기(2020) 홍보의 성과 및 개선사항 검토, 최근의 조사환경 분석을 통해 총조사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기본계획('25.1.22.) 및 세부 실행계획(6.11.)을 수립하여 총조사 실시 단계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실시(6월~11월) ○ 센서스 100년을 맞아, 그간 국민과 함께 해온 센서스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음 - 국민에게 센서스의 실질적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총조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
14. 쌀 소비 통계 오류 시정 및 통계 생산 체계 구축 · 현행 쌀 소비 통계의 오류를 시정하여 변화된 식생활 현실을 반영한 통계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가구내 쌀소비량은 현행대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가구의 외식 쌀소비량은 현행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에서 외식업체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○ 가구의 외식 쌀소비량 조사 개선 시험조사(안('26.3)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현행</th><th>개 선안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· 조사대상: 가구 · 조사방법: 외식 쌀은 외식횟수×가구1끼니쌀량 · 1인당 쌀 소비량 산출식: $\frac{\text{가구원수} \times \text{당월 일수} + (\text{절대횟수} - \text{외식횟수}) / 3}{\text{가구원수}}$ </td><td> · 조사대상: 외식업체 등 추가 · 조사방법: 외식 쌀은 외식업체 조사 · 1인당 쌀 소비량 산출식: $\frac{\text{가구내 쌀소비량} + \text{외식업체 등 쌀 소비량}}{\text{인구수}}$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향후 추진계획> ☐ 외식 쌀 소비량조사 개선 시험조사 실시('26.11.) ○ 조사 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('26.12.~'27.4.) ☐ 개선된 방식으로 외식 쌀 소비량조사 실시('27.11.) ○ 외식 쌀 RSE 고려한 적절한 규모의 표본조사 실시 ○ 내식 쌀 일계부 구매내역 기반의 연 1회 조사 병행 ○ 개선된 방식의 조사 결과 공표('28.1.)	현행	개 선안	· 조사대상: 가구 · 조사방법: 외식 쌀은 외식횟수×가구1끼니쌀량 · 1인당 쌀 소비량 산출식: $\frac{\text{가구원수} \times \text{당월 일수} + (\text{절대횟수} - \text{외식횟수}) / 3}{\text{가구원수}}$	· 조사대상: 외식업체 등 추가 · 조사방법: 외식 쌀은 외식업체 조사 · 1인당 쌀 소비량 산출식: $\frac{\text{가구내 쌀소비량} + \text{외식업체 등 쌀 소비량}}{\text{인구수}}$
현행	개 선안				
· 조사대상: 가구 · 조사방법: 외식 쌀은 외식횟수×가구1끼니쌀량 · 1인당 쌀 소비량 산출식: $\frac{\text{가구원수} \times \text{당월 일수} + (\text{절대횟수} - \text{외식횟수}) / 3}{\text{가구원수}}$	· 조사대상: 외식업체 등 추가 · 조사방법: 외식 쌀은 외식업체 조사 · 1인당 쌀 소비량 산출식: $\frac{\text{가구내 쌀소비량} + \text{외식업체 등 쌀 소비량}}{\text{인구수}}$				
15. 데이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·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총괄·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범정부 데이터 총괄·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법령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 중('25.10.~) ○ 「국가데이터기본법」 제정 추진('26.5.27. 의원발의) * (주요 내용) 국가데이터 지정·관리,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, 국가데이터 연계·활용 활성화 등 ○ ‘국가통계위원회 국가데이터 특별분과’ 및 ‘민관협의체’ 설치·운영을 통해 잠정 추진 체계 마련('26.2.~) * 특별분과·민관협의체 각각 2회 개최('26.2.,4.)				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향후 추진계획> ☐ 「국가데이터기본법」 제정 추진 ○ 국회 심의 및 관계부처 설명 등 적극 협조 ☐ 법 시행에 따른 국가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○ 국가데이터 지정,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 계획 심의·의결 등 범정부 데이터 총괄·조정 역할 수행
16. 실질적 보안 강화 조치 및 대응 시스템 마련 · 상시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보안을 강화하고,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현재 국정원 지침에 따라 <u>출입보안, 공급망 보안을 철저히 수행</u>하여 <u>위협에 대응 중</u> ○ 비인가인원의 전산실 접근 차단, 모든 전산 장비는 안정성검증을 완료한 장비로 운용 ○ 대도청 탐지 활동을 적극 수행 중 ☐ 다만, 신종 보안 위협(무선백도어 해킹)은 현재 국기정보원 등 관계기관 간 상황 공유 및 협의 중 ○ 무선백도어 해킹 대비 시스템을 도입 운용 중인 기관의 동향, 위협의 변화 추이 등 모니터링 <향후 추진계획> ☐ 국정원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정 및 관련 지침 모니터링 후 적극 대응 ○ 정부의 무선백도어 해킹 관련 정보보안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예산 확보 노력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7. KOSIS 복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세부 계획 마련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통계포털(KOSIS) 장기 마비 사태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향후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대책을 마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화재로 마비된 KOSIS 시스템 복구 조치 - 국정자원 화재('25.9.26.) 이후 복구 기간 동안 임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을 통해 주요 통계자료 제공 및 KOSIS 시스템 복구 완료('25.10.24.) ☐ KOSIS 장애 대비 대체서비스 시스템 구축 - 대규모 장애 발생 시 KOSIS 주요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서비스 시스템 구축 * KOSIS 대체서비스 구축 계획(안) 수립('26.3월) * KOSIS 장기 마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통계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 <향후 추진계획> ☐ KOSIS 주요통계 대체 서비스 개발 및 제공(~'26.9.) - KOSIS 대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테스트 - KOSIS 장애 발생 시 주요통계 자료 제공
18. 지방 조직 명칭 일원화 및 행정 정합성 확보 국가데이터처 승격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지방청 간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시정하기 위해, 체계적인 명칭 일원화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완료</u> ☐ 「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동법령 「직제 시행규칙」 개정을 통한 소속기관 명칭 일원화 조치 완료('25.12.30. 시행) (前)통계인재개발원 → (現)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(前)국가통계연구원 → (現)국가데이터연구원 (前)지방통계청 → (現)지방데이터청
19. 가구 단위 조사 방식의 개인 중심 전환 검토 기존 가구 단위 조사 방식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완료</u> ☐ 개인단위 조사 실시 - 금융 및 가상자산은 개인단위로 조사 - 떨어져 사는 가구원 등을 위한 개인별 모바일 조사 병행 실시 중('23년~)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20.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공표 및 플랫폼 종사자 통계 구축 (1) 사업소득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업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18년 ILO 개정 체계를 반영한 종사상지위 분류를 선도적으로 공표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현재 現지위와 新지위간 연계자료 및 新지위의 시계열 안정성 등을 분석·검토 중 ○ 現·新지위 연계분석을 통해 現지위와 新지위간 정합성 검토 중 ○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新지위 세부 분류단위별 시계열 안정성 및 표본오차 등 검토 중 <향후 추진계획> ☐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 검토 및 논의 지속('26년) ○ 新종사상지위 도입에 따른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○ 이용자 수요, 관련 조사(부사조사) 재설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(노동부, 재경부)와 공표 시점 논의 추진
20.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공표 및 플랫폼 종사자 통계 구축 · 실험적 통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마련을 협의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중 ☐ 현재 고용노동부(한국고용정보원 포함) 주도로 국가데이터처의 '26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조사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모집단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올해 중 시범조사(9월 예정), 국가 승인 통계 또는 실험적 통계 개발, 공표(12월 예정) 등을 목표로 추진 중임 ○ 플랫폼 관련 조사 개발사업('26년 4월~) ○ 플랫폼노동자 선별 문항, 조사방식, 모집단 추정 등 관련 조사 결과 신뢰성 및 표본 추출 개선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향후 추진계획> ☐ 승인통계(실험적 통계도 포함) 추진 지속('26년) ○ '26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플랫폼 관련 조사 개발사업 지속 ○ 국가통계(실험적 통계 포함) 승인 신청('26년 8월) ○ 플랫폼 관련 시범조사('26년 9~10월) ○ 플랫폼 관련 시범조사 공표('26년 12월)
21. 외로움 조사 항목 세분화 및 국제 비교성 확보 •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로움 관련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완하는 등 국가 간 정밀한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중</u> ☐ '25년 사회조사에 신규 문항(3개) 추가 조사 ○ 고립·은둔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외로움, 외출, 현재 외출 횟수의 이유에 대한 문항 추가 * 총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 조사 ▪ (홀수 해) 복지, 사회참여, 여가, 소득과 소비, 노동 ▪ (짝수 해) 가족, 교육과 훈련, 건강, 범죄와 안전, 생활환경 ☐ 고립·은둔 측정을 위한 국제 기준 부재 ○ OECD는 비정기적으로 웰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“How's Life?” 보고서 발간(2024), 사회적 연결(social connections) 관련 5개 지표 작성 중 ○ OECD는 사회적 연결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, 필요시 조사 내용 개선 검토 <향후 추진계획> ☐ 조사표 개선을 위해 전문가·관계부처와 지속적 논의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22.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개선 방안 마련 ·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<u>조치완료</u> ☐ 장애인 구분 선발, 관리계획 수립,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 중 ○ '26년 말까지 장애인 공무원 13명이 신규 임용 예정이며, 예정대로 총원 시 고용률은 4.17% (의무고용률 3.8%) ○ 비공무원은 사업부서별 고용목표 부여, 장애인 구분선발, 인센티브 부여, 정기 모니터링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계획 수립('26.2월) <향후 추진계획> ☐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하여 년 및 분기별 점검·평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